

의정칼럼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필자의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1년 임기가 지난 6월로 종료됐다. 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윤리특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했으나 제도의 한계와 현실의 벽도 분명히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시의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해 ‘징계 요구·회부 기한’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지나치게 촉박한 기한으로 인해 윤리규정 위반 의원의 징계가 무산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규칙 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필자가 추진하고자 했던 더 본질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의회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규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국회법)은 의회 징계 유형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필자는 이 사안의 법적 검토를 위해 다수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구했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요소가 크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마음속 생각의 자유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이 내면의 신념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단순한 권고나 아닌, 징계로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부작위(행동하지 않을 자유)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징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되는 순간, 심각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죄광고’와 관련해 위헌성을 인정하 바 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안(강제 발언)에서 반복적으로 위헌성을 인정해왔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공개회의의 질책(censure)’ 제도는 활용하지만, 강제 사과는 법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국회와 지방의회는 여전히 국민의 대표기관 내부에서조차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인은 공인이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가 국민적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명분 뒤에 헌법적 가치 침해가 숨어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본 책무다. 일각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지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수범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본질을 오해한 주장이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순간, 해당 개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방의원, 나아가 국회의원 스스로 이 규정을 고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현실이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는 말처럼, 제도 개선의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빼어난 교훈을 얻었다. 반헌법적 계엄 선언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했다. 헌법 개정도 주요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가 의회 내부에서 침해당하는 현실을 방지할 수는 없다. 입법기관 내부의 위헌 요소를 외면하면서, 누가 헌법 수호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필자의 윤리특위 위원장 임기는 끝났지만, 근본적인 헌법 침해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조항의 위헌성 문제는 결코 개인의 일탈을 용호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문제다.

필자는 이 사안을 더 많은 시민, 법조계, 정치권의 공론에 부치고, 입법 청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 앞에 떳떳할 수는 없다. 입법기관 스스로 헌법을 지키는 일, 바로 이런 작은 규정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민과 법조계, 정치권의 폭넓은 논의와 지지를 요청드린다.

社說

지역필수의사제도 무산 위기 의료 취약지 전남의 현실

의료 취약지가 많은 전남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에 참여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전남도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전남도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주거, 연수·연구비, 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을 제시했다. 의과대학이 부재한 지역 특성상 수행기간 4곳 모두 연결고리가 없어 곁돌고 있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원도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이 유일한 실정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학과 등 8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근 근무 가능하도록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면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모두 24명의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신청자가 전무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 공모에 참여해 함께 선정된 강원·경남·제주도 등도 인력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대로면 좌초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나 올스톱 직전이다. 지역의 필수 의사를 확보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면 우선적으로 자격 취득 5년 미만 해당자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모집대상을 기존 진료인력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낙후된 정주 여건이 발목을 잡고있는 전남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주거 환경은 물론 교육과 문화 혜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때문이다. 의정감독과 전문의 감소 추세 속에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전남도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공감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도 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전국에서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다.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 맞춤형으로 지원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필수 의사제 정상 추진이 절실하다. 의료공백 최소화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광주·전남 손잡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성과 내길

광주시에 전남도 공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이 열린다. 안도길·전진숙·신정훈·서미화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지정의 당위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경과제 반영을 통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다.

광주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화순 특구를 기반으로 백산·면역치료 분야의 의약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 특화 분야의 융복합이 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셈으로 동반성장 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공동 유치에 나선 배경으로, 의료기기-의약품 연계 제품 개발과 지원 기반 시설 공유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저비용·강소형 모델을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바이오헬스복합단지가 우선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현안으로 제안됐다.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는데, 총출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에 전력을 아야겠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고도화한 첨단 의료복합단지도 꼭 성공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생명과학·의료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 건강 체계를 한 곳에서 수행할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는 등 다른 지역들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서남권 또한 나름 특화돼 있다는 평가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다.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손을 맞잡았다. 의미가 크다.

기고



길강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기억과 환대

얼마 전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작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날을 품고, 오늘을 함께 살다”라는 주제 아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후손인 특별귀화자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웃으로 정중히 초청하는 시간이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단 두 가정뿐이다. 이미 귀화했지만, 이들의 삶과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었다.

이번 초청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 그 오랜 기다림과 숭고한 역사를 지역 공동체가 기억이 품는 상징적 응답이었다.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땅에서 조국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긴 시간을 살아온 후손들은 그날 “고맙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다. 또 다른 후손은 “할아버지 덕분에 꿈꾸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나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고순자는 서툰 한국어로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 말들에 담긴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과연 감사의 말은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 생각해보면, 진정 감사를 전해야 할 이는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단지 국적을 부여받은 귀화자가 아니다. 잊혀가던 이름과 사라질 뻔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돌아온 ‘기억의 계승자’이며, 살아 있는 역사다.

진정한 감사는 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을 잇고 책임을 다하며 환대와 연대의 공동체를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만남은 환대의 예식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기억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를 다시 묻는 응답의 시간이었다.

국적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맞이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환대의 윤리임을 새삼 성찰하게 했다.

기억은 기록에만 머물지 않는다. 진정한 기억은 사람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이어진다.

교과서 속 이름은 잊힐 수 있어도 후손의 눈빛과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이들을 품어준 이웃의 손길 속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은 다시 살아난다.

광주 시민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시선과 태도는 특별했다. 고려인마을 주민들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장면은 광주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정의로운 감수성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는 일은 지역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적을 넘어 정적으로, 정착을 넘어 이웃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함께하는 일, 그것이 아날로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책임지며 내일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현장칼럼



김종빈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고조사연구원

차량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위험

“나는 보지 못했다”는 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말이다. 운전자는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보고 고개까지 돌려 주변을 살피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각지대(死角地帶)란 차량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로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특히 화물차나 버스처럼 차체가 높고 운전석이 높은 차량일수록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진다. 대표적으로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일반 승용차보다 2

배 가까이 걸어 사고 위험이 더 크다. 2022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 길이는 약 8.3m로, 승용차(4.2m), 소형 화물차(4.0m), SUV(5.0m)보다도 확연히 길다.

실제, 사고 통계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중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은 반면 승합차와 화물차에 의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운전자가 우측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차량 제조사들이 사각지대 감지 센서, 360도 어라운드뷰, 자동 긴급 제동 장치(AEB) 등을 도입해 사고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

하며,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는 결국 운전자의 인식과 행동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방어운전 습관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갖는 사각지대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특히 주차장 진출입,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골목길 교차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히 운전해야 한다. 사이드미러와 룸미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는 습관(숄더체크)을 들이며,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행하는 ‘예방적 운전 습관’도 필요하다.

사각지대는 줄일 수 있다. 기술 개발과 함께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방어운전 습관이 동반된다면 진정한 교통 안전이 실현될 수 있다.

그래픽 뉴스

비은행 건설업·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국민은행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10.26%로 집계됐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이 10%를 넘는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 말까지도 1~2%대에 그쳤던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은 2023년 1분기 3.38%, 2분기 4.17%, 3분기 4.81%, 4분기 4.85% 등으로 오르더니 지난해 1분기 7.39%로 뛰었다. 이후로도 지난해 2분기 7.98%, 3분기 9.11% 등으로 상승했다가 4분기 8.67%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단숨에 10%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 역시 7.91%에 달해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은 2022년 말까지 2%를 밑돌다가 2023년 1분기 3.15%, 2분기 3.46%, 3분기 4.00%로 거침없이 상승했다. 그해 4분기 3.89%로 잠시 하락했지만, 지난해 1분기 5.85%로 치솟았고, 2분기 6.16%, 3분기 6.82%, 4분기 6.61%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이런 흐름은 비은행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